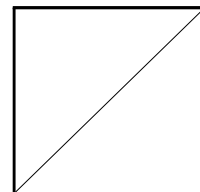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75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3. 4. (제 4 차)	

공인회계사 000에 대한 징계의결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3. 4.

## 1. 의결주문

공인회계사 000에 대해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20.2.14.)에 따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따라 공인회계사 000의 공인회계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 0000(주)의 외부감사업무와 관련하여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회계 처리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공인회계사 000에 대해 '직무일부(감사 관련 업무 등)정지 6월' 조치 (별지)

☐ 효력 개시 : 2020년 4월 1일

## 4. 참고사항

가. 2020년 제1차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 의결(2020.2.14.)

나. 관계법규([붙임](#))

(별지)

## 공인회계사 000에 대한 징계의결안

### 1. 징계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 0 0 0

등록번호 및 등록일 : 제0000호 (0000.0.00.)

사무소명칭 및 소재지 : 00000 000 0000 00 000 00

### 2. 징계의결안(처분주문)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따라 공인회계사 000에 대하여 2020.4.1.~2020.9.30.(6월)까지 직무일부\*정지를 명한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 관련 모든 업무(감사계약 체결, 중간·기말감사, 감사보고서 작성 등)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분·반기 검토업무

### 3. 징계사유

□ 공인회계사 000는 0000(주)(이하 ‘회사’)의 제61기(’16.1.1.~’16.12.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으로써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였음

○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16년 0,000백만원)

- 회사가 정당한 지출 근거 없이 특정 부실거래처 및 일부 임직원에게 유출된 자금을 정상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허위계상하고 관련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였음에도,
- 매출채권에 대한 실재성 확인 및 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검토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붙임)

## 관계 법규

###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4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17조제8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표이사를 포함한다)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 가. 주권상장법인
  - 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다.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 라.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4.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 공인회계사법

**제48조(징계)**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
  3. 공인회계사회회칙에 위반한 때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②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등록취소
  2. 2년이하의 직무정지
  3. 1년이하의 일부직무정지
  4. 견책
- ③ 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 각호의 1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당해 공인회계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 ⑤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39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치 또는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회계법인·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공인회계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공인회계사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 또는 공인회계사의 징계 사실을 알기 위하여 조치 또는 징계 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열람·등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0조(징계위원회)**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둔다.

**제31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그외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감사원 및 법제처의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금융위원회의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명
3. 공인회계사회의 회장이 그 소속 상근부회장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비상임위원중 1인
5. 기획재정부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제32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법 제48조 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징계의결기한)**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5조(징계위원회의 의결)**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 ② 징계혐의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중 불공정한 의결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7조(징계의결통보 등)**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회계조사국
연 락 처	02-2100-2695	02-3145-7301